

“남북 자원협력, ‘장밋빛 미래’ 낙관 금물 북한 광해문제 해결 반드시 필요”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심포지엄 기조강연서 밝혀
이정룡 광해공단 이사장 “광물공사와의 통합안 협의진행 중”

“두만강은 광산에서 흘러나온 배수(排水)로 인해 오염수준이 지극히 심각합니다. 물 색깔이 아예 회색일 지경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광해(鑛害) 현상은 좌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에너지·자원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면 이 문제도 반드시 거론해야 합니다.”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이 북한 자원개발 현실의 이면을 전했다. 풍부한 잠재력이라는 감정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현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8일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컨벤션 호텔에서 열린 ‘2018 제6회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에서 ‘에너지·자원 남북 교류협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북한 에너지·자원 정책 ▲남북 광산물 교역 ▲남북 지하자원개발 협력 등

비롯해 중국·일본·인도·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태국·호주·독일·프랑스·캐나다·페루·잠비아 등 12개국의 광업 전문가와 정부관계자가 집결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자원공학회·한국암반공학회 등 공동으로 주최해 ‘지속가능한 광업발전을 위한 광해방지기술 및 정책’을 주제로 강연 및 분임토론을 열었다.

이정룡 광해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론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하는 안이 협의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광해공단의 성과에 대해 지반침하방지기술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열거했다. 그는 “지반침하방지기술은 서울에서도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 현장에서 활용됐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이정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8일 강원랜드에서 열린 ‘제6회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에서 광물공사와의 통합안을 협의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기술 동향 및 추진방향 ▲일본의 광해방지기술 동향 및 추진방향 ▲프랑스 광해방지기술 동향 및 추진방향 ▲광물 찌꺼기로부터의 유기금속 회수 등을 논의했다.

사업사례 세션에서는 ▲친환경 광해복구 프로젝트 사례(캐나다 AMES 사) ▲페루의 광해관리 현황 및 복구사업 사례 ▲광



‘제6회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 참석자들이 내외귀빈 축사를 듣고 있다. 이날 축사는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서비스가 제공됐다.

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광해 현상도 함께 짚었다.

이 회장은 지속 가능한 남북 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해 북한의 광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광산지역 오염 상황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북한은 물론 인접국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며 “이 경우 통일 과정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광산환경오염현황과역 및 관리·복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광산 부산물에 포함된 유기금속 회수를 통한 경험사업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2018 추계자원연합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대한민국을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단이 주관하고 협력하는 폐광지역 뉴딜 사업이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됐다”며 “‘에코잡시티 태백’ 프로젝트를 통해 폐광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최문순 강원지사장은 대독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최 지사는 “과거 광업이 성황리에 이뤄졌던 도내 지역들은 이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마침 폐광 지역인 이곳에서 활성화를 논의하는 12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많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광해기술 ▲사업사례 ▲사회적 가치 ▲광업정책 등을 주제로 분임토론을 열었다.

광해기술 세션에서는 ▲한국의 광해방

산개발에 따른 사면안정문제 및 대책(우즈베키스탄 지질광물위원회) ▲광해관련 국제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사례 등을 세부 주제로 토론했다.

사회적 가치 세션에서는 ▲중국 에너지·환경 정책 변화 및 광해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자원협력 방안 ▲독일 통일 후 광산복구정책 및 사업 추진 사례 등을 논의했다.

광업정책 세션에서는 ▲한국의 폐광지역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삶의 질 개선 ▲인도네시아 광해 발생현황 및 광해복구 정책 ▲태국 광해·환경복구 및 사업 사례 등을 세부 주제로 토론했다.

심포지엄은 9일까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삼탄아트마인, 함백수질정화시설, 광명동굴을 견학했다.

강원도 정선=박정배 기자 pjb@

정부,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한다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발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이 외에도 석탄발전소 섀트다운·연료세율 조정 등 비상시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면서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또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석탄화력 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천포 1·2호기보다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이 3배가량 많은 삼천포 5·6호기를 불철 섀트다운 대상으로 조정한다.

석탄연료(유연탄)에 대한 비용도 높인다. 정부

는 내년 4월 유연탄과 LNG의 가격 비율을 현재 1:2.5 수준에서 2:1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급전순위는 약폭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결정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재난 수준으로 대응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날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학교·유치원에는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 삭제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상한 제약

학교·유치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

하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는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검증을 거쳐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kimyj@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 말까지 연장될 듯

연장안 국무회의 의결...본회의 통과되면 확정

다음달 31일 폐기를 앞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3년까지, 동법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20대 후반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로 제출돼 심의·의결을 거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매년 정원의 3%)하는 제도로, 다음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법안 유효기간 2023년(제5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정부 주도하에 ‘청년선호기업’ 지정·지원 ▲중년기업에 대한 청년고용 지원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등 변화가 생긴다.

한편, 청년고용법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 비율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문기 인턴기자 mkchang@

“회원의 소통과 행복을 이어가는 전라북도회”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CLEAN 경영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祝 제2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최낙춘 대표이사 주식회사 포유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전울영 대표이사 호성건설(주)



한국전력공사사장 표창 이승호 대표이사 (주)한남전설

회장

김은식 주식회사 세움이엔씨

부회장

양관식 주식회사 대운

중앙회 이사

이화준 거창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이사

권광식 대성전력(주)

전기신문 이사

이재수 (유)건국전력

전기산업연구원 이사

손영관 (주)명덕전력

공제조합장학회 감사

윤상길 주식회사 중앙전기

운영위원회

- 위원장 김은식 주식회사 세움이엔씨
- 위원 양관식 주식회사 대운
- 위원 노영환 (주)서영종합엔지니어링
- 위원 이상진 (주)진진
- 위원 최병인 주식회사 대광전력
- 위원 최춘열 유일산업(유)
- 위원 최낙춘 (주)포유
- 위원 최정환 주식회사 국일
- 위원 김대성 (주)정동
- 위원 육금수 (주)대서전력
- 위원 김영탁 (주)도원
- 위원 이관호 화성전력
- 위원 이승호 (주)한남전설

윤리위원회

- 위원장 양관식 주식회사 대운
- 위원 김한성 (주)대성이엔씨
- 위원 탁병용 (주)용선전력
- 위원 조병언 (주)용비전력
- 위원 양승용 (유)삼우전기
- 위원 박인규 (주)이공이엔지
- 위원 전윤영 호성건설(주)
- 위원 전근영 현성이엔씨
- 위원 박용덕 주식회사 비룡전력
- 위원 이태희 (유)효성전기
- 위원 조성철 해남기업 주식회사
- 위원 김용희 효성중전기 주식회사
- 위원 이상연 세인건설(유)
- 위원 황재국 주식회사 아린
- 위원 손주환 제일전기

중앙회 위원회

- 건축산업설비위원장 김경미 대한엔지니어링
- 기획위원 고상범 (주)황제
- 기술위원 김재욱 (유)세명산업개발
- 신성장사업위원 최병인 주식회사 대광전력
- 해외위원 문경식 (주)제일전력
- 인력개발위원 유일환 (유)일광전력공사
- 송변배전설도위원 이병진 (주)광원전력
- 원가관리위원 김정진 (유)이화전력
- 중앙선거관리위원 여운기 주식회사 대전기업